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하면 30만원 받는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 1,000명에
보조금...숙련인력 사기진작

국 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년 (1,260일) 이상 장기 근속한 건설 근로자에게 선착순 1,000명에 한하여 7월 20일부터 결혼 또는 출산보조금(1인당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건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 차원에서 마련된 이 사업은 親 서민정책의 하나로 건설 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추진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건설 근로자공제회 본사(건설회관13층) 또는 지부(8개소)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02-547-5711~6)로 문의하고, 신청 서나 준비서류는 www.cwma.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벽산건설, 지열시스템 시공기술 2건 특허등록

안성 블루밍 공도 디자인시티에
적용

벽 산건설은 지난 6월 13일 건물
의 냉난방 열원으로 지열을

이용하는 지열시스템 관련기술 2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기술은 ‘상하 융합형 지중 열교환기 및 그 설치방법’ 과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열교환기 시공방법’ 이다.

이중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열교환기 시공방법’ 은 기존 지열시스템의 최대 단점인 높은 초기투자비를 해결하는 고효율·저가형 기술로 지열시스템 신뢰도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지하로 150m 이상 천공해야만 지중열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술을 활용하면 10m의 저심도에 대구경 지중열교환기를 설치, 기존 설비와 동일한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시공상의 간편함과 20~25% 정도의 저렴한 공사비, 적용범위도 다양해졌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벽산건설은 이번 특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열 관련 3개의 특허를 진행 중에 있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종합건설사 ‘ESCO 1호 기업’ 이라는 명성에 어울리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적용 할 예정이다”며 “이번 특허 기술을 경기도 안성 블루밍 공도 디자인시티의 커뮤니티 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국토부, 아파트 품질 크게 강화한다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계획' 공고

앞으로 아파트 품질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입주자가 직접 주택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계획을 지난 7월 공고했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올해 평가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작년 한 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해당 단지는 174개 업체, 316개 단지, 22만963가구다.

아파트 품질 평가는 입주자를 상대로 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 소음, 환기, 실내마감 등 내부설비 품질(전용 부분)과 동 및 단지의 디자인과 공간구성, 엘리베이터, 동 내부 환기와 채광,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 외부 품질(공용 부분), 안전 시설, 하자 처리 등에 대한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LH,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 접수하면 9~10월 조사한 뒤 12월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한다.

국토부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아파트 품질 강화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우수 사업자로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흥한주택, 서령개발, 매직리전, 우남건설이 선정됐다.

서울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불법하도급 근절에 앞장

서울시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해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하청 업체의 실질적인 공사비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건설공사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를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으로 원청업체의 비리를 막고 저가로 인한 부실공사, 하청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산출한 하도급비용내역서 중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일

부 건설사들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발생, 심사 시행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하도급율은 원청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하도급금액을 실제 하도급 계약시 산출한 금액으로 나눠 산정하는 것으로, 건설사는 82% 이상을 맞춰 심사를 피하기 위해 산출내역서 작성부터 하도급 공종 단가를 고의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율이 82%이상 되더라도 원도급자가 고의적으로 하도급공종의 단가를 낮춰 하도급률을 높인 경우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 부적정시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하도급율이 82%이상이나 시가 산정한 '하도급검토기준 표준내역서'의 82%에 미달하는 경우가 심사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

하도급검토기준 표준금액은 시가 입찰 시 제시하는 예정가격내역서상 공종별 단가에 입찰시 낙찰률(낙찰가/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시는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시행을 지난 7월 1일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시는 향후 정부 부처와 계약관련법령 등의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해 제도적으로 '입찰시 산출내역서 적정성심사' 절차를 도입해 하도급계약

이 부적절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신축 공공기관 빗물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빗물 재활용’ 차원, 내년 6월부터 적용

내년 6월 이후 신축되는 공공기관 청사에는 빗물을 생활용수 등으로 쓰는 ‘빗물이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 재이용 촉진법)이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공포된 이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내년 6월 시행된다.

이 법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한 번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의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수도법상 빗물이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뿐이었으나 이제는 새 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에도 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새 법은 또 관광단지·산업단지·

택지 개발사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하수도법상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은 숙박업소나 공장 등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별 시설물로 한정돼 있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10년마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후 공공건물 ESCO 사업 확대한다

정부,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 마련

정부는 10년 이상 노후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을 확대하고, 10% 이상 에너지절감이 기대되는 경우 ESCO사업이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을 확정했다.

이같은 대책은 올 하절기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피크타임)의 예비전력은 460만kW(예비율 6.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대 전력 수요는 냉방 수요의 급증으로 지난해보다 11.8% 증

가한 7070만kW에 달하지만 공급 능력은 3.7% 늘어난 7530만kW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빠른 경기회복과 겨울 이상저온으로 올해 에너지소비량이 전년보다 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초 설정한 에너지절약목표 400만 TOE(석유환산 톤)를 500만 TOE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노후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ESCO 사업을 확대하고, 10% 이상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ESCO 사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 TOE 이상 건물 586개에 대해 권장 온도 26℃(판매시설 등은 25℃)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8월 중 피크시간(11~15시)에는 전국을 6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서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 건물의 개별냉방기를 한 시간마다 10분씩 순차 운휴하기로 했다.

울산, 경기 등 8개 생태산업단지에서 한 기업의 폐열 등 잉여에너지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에너지순환 프로젝트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름철 냉방수요 분산을 위해 원격관리시스템, 축냉기기 등 부하관리기기를 보급하고,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